

“특검 · 헌재 살해 협박, 법 규정된 테러”

표창원 “보수 단체 ‘가짜뉴스’ 배포, 청와대 · 전경련 배후 의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걱정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친박단체 안에서 이정미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백색 테러 위협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테러 개념에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보수 단체의 백색테러 위협에 대해 “헌재나 특검, 국민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정미 재판관 살해 위협’ 뿐 아니라 ‘합북단 모집’, ‘회칼, 유언장 준비’ 등 표현을 쓴 게시물에 대해 ‘처벌대상’이라면 “문제는 경찰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나 아랍 인사를 폄하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 차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상황이 오기 전에도 이미 전경련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우익단체들에 지급한 상황들이 확인됐다”며 “전경련이 일단 의심받



특검 연장법 상정하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행위를 받고 있다.

고 있고, “청와대 허헌준 전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하다가 사직했는데,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업무였다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짜뉴스’의 배후로 청와대와 전경련을 지목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도성과 조직성, 그리고 시기적인 특성을 봐서 정치 개입의 의도가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넷길 사건’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같은 걱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른정당 경선을 가다

선거인단 4 · 여론조사 3 · 당원 3

비른정당이 2일 ‘선거인단 40% · 당원 30% · 여론조사 30%’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대선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국민대표 선거인단 40%, 당원 30%, 여론조사 30% 이상에서 윤곽을 잡아 봤다”며 “상세한 것은 오늘 오후 경선관리위원회 후 내일 최고위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선거인단은 4,000명 샘플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며 “문자 투표는 국민대표 선거인단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선거인단 4,000명에게 SNS든 방송이든 보게 해서, 예를 들어 영남권이면 거기 있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바로 투표하게 해서 가능하면 그날 공개되게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4군데를 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바일로 할지 인터넷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인터넷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공인인증서 · 액티브엑스 폐지하겠다”

“ICT 규제,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

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이라며 “채로 제작하는 정부 ·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안희정 “연정시 내각 공유… 자유한국당 포함”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정책 협약 과정에서 내각 구성을 공유해야 하지 않겠냐”며 내각 일부를 연정 상대에 내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자유한국당과도 개혁 과제 공유를 전제로 협치 틀에 포함시켜 내각을 공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남겨뒀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연정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협치 틀을 상정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 협의체를 통해 어떠한 범주까지 연합정부를 꾸리는 세력을 모을

지 구체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지사는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에 장관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뜻이나 물음에 “구체적인 정책 협약과정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내각 구성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며 긍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협치 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가진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원내교섭단체 누구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가능하게 만들어야 의회정치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번 보궐선거 대상은 전주4 선거구 공역의원 1곳과 완주라 선거구 기초의원 1곳이다.

후보자격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유한국당 정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동량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지나야 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 관련 서류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도당 사무처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특검, 6일 수사발표 때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키로

박영수(65 ·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꾸러질 특검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 기간 연장’ 등 결정적 순간에 연거푸 쓴잔을 마셨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90일의 공식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휴일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록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에초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긴 인원이 30명에 달하고 이에 뒤따르는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발표 시일을 6일로 미루고 준비 작업 중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지난 12월1일 박 특검 임명 이후부터 삼성그룹 뇌물죄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잘’을 맨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들쭉던 이광범 특검팀이 그랬던 것처럼 수사 결과 발표 시 특검 운영제도 개선점을 함께 내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 반대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행정법원에 불응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리며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응인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제안을 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